

2021
6. 21

KRIHS POLICY BRIEF
No. 821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전략



주요내용

- 1 세계 각국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핵화된 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경제 침체, 인재 유출, 대학 붕괴, 심지어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공간적 양극화 심화
- 2 초광역권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집적체로서, 고트망(Gottmann)이 1961년에 관찰한 미국 보스턴-워싱턴 회랑지역(Bos-Wash)이 그 대표적 사례
- 3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초광역적 공간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나, 공간 전략의 부재, 중앙정부 주도로 인한 시·도의 관심 부족, 사업 범위의 인위적 설정과 유연성 부족,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성과 중심의 단기사업 추진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정책방안

- 1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이슈 중 우선 협력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적 아래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에 대한 종합적 지원 필요
- 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5대 전략
 - (압축compact) 지방 대도시의 중추거점 기능 강화
*예: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 지방 국립대 육성 등 대도시의 거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시행
 - (연결network)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예: 생활권을 고려하여 광역교통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다양성diversity) 산업 다양성 확대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및 청년 노동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예: 산업단지 복합화, 스마트그린산단, 캠퍼스혁신파크, 지방산단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 강화
 - (거버넌스governance)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예: 초광역권 관장 행정조직 검토 및 초광역권 우수사례 확산
 - (유연성flexibility) 목적과 필요에 따라 유연한 초광역권 설정
*예: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가칭 '초광역권 종합계획' 등에 대하여 국가지원체계 마련

박경현 연구위원
이윤석 부연구위원
허동숙 부연구위원
최예슬 부연구위원

1

지역의 위기와 초광역권의 부상

세계 각국은 단일 대도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핵화된 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 중

- 세계경제는 거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mega-city)는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UN 2018)
- 경제공간 단위의 세계화 및 광역화와 관련하여 메가시티, 세계도시(global city), 글로벌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슈퍼리전(super region), 메가리전(mega region), 다중심도시지역(polycentric urban region) 등이 정책개념으로 등장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광역의 계획 권한 및 협상력을 강화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10개 메가리전 구상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그림 1 영국·프랑스·독일의 초광역적 공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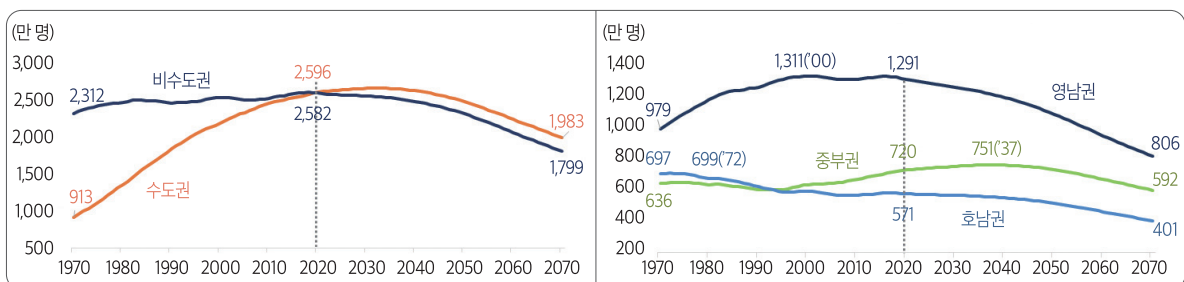


출처: 박경현 외 2020, 52; 54; 57 (원자료는 ① Institute for Government 2021, ② Vikidia. https://fr.wikidid.org/wiki/R%C3%A9gion_ (2021년 2월 2일 검색), ③ OECD 2019, 28의 그림 수정)

우리나라는 인구·생산·소득 등 수도권 집중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경제 침체, 인재 유출, 지역대학 붕괴, 심지어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위기에 봉착

- 총 국토면적 11.8%의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 권역별로는 2017년 영남권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19년 호남권, 2033년 수도권, 2038년에는 중부권까지 모든 권역에 마이너스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통계청 2019)
- 경제·행정·문화·사회 기능을 공간적으로 광역화·통합함으로써 지방의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성장 동인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초광역적 공간전략 모색 시급

그림 2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 권역별 인구 추이 및 전망(1970~2070년)



출처: 박경현 외 2020, 5 (원자료는 통계청 2020).

2

초광역권의 개념과 특징

일반적으로 초광역권이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집적체'를 의미

- 광역권에 대한 관심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인구성장과 외연적 확산 등을 통해 인근지역과 섞이면서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 도시·경제권역으로 병합되는 현상이 관찰되면서부터 시작
-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교외화 등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대가 빠르게 진행된 미국에서 일찍부터 관찰되었는데, 고트망(Gottmann)이 1961년에 관찰한 미국 보스턴-워싱턴 회랑지역(Bos-Wash)이 그 대표적 사례

고트망이 보스턴-워싱턴 회랑지역(Bos-Wash)을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라 명명한 이후, 글로벌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 메가리전(mega region) 등 거대공간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해석이 다양하게 전개됨

- 1980년대 이후 세계화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도시들의 역량이 중시되면서 세계도시(world city, global city) 개념이 등장했고, 이들 세계도시가 주변지역으로 확장되는 광역적 공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글로벌 도시지역, 메가시티리전 등의 초광역권 개념이 급부상
- 이 무렵 유럽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내 특정 지역들이 도시-지역 스케일로 확장·재구조화는 현상에 주목, 복수 거점들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개념화하는 연구가 진행됨
 - 런던, 파리 등 세계도시뿐 아니라 네덜란드 란스타드(Randstad)와 독일 라인-루르(Rhine-Ruhr) 등의 지역까지 포괄하는 다중심성을 강조하는 메가시티리전 개념 등장
- 한편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주강 삼각주 및 장강 삼각주, 일본의 도쿄-오사카(Tokaido) 등이 부상하면서 아시아의 거대한 인구집중 및 광역적 성장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이 등장
 - 플로리다는 최근 연구에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29개의 메가리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부산 경부축이 주요 메가리전의 하나로 포함됨(Bloomberg Cityab 2019)

표 1 초광역적 공간구조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개념	정의	학자(발표연도)
메갈로폴리스 Megalopolis	• 연속적이고 내부적으로 상호 연결된 매우 거대한 다핵적 도시체계	Gottmann (1961년)
글로벌 도시지역 Global city-region	• 자본, 노동, 사회적 활동이 복잡한 방법으로 연계되면서 국가단위를 초월하여 형성된 고밀 집중체 • 주변지역 배후지, 주거지 등을 포함하는 대도시권의 확장 또는 연속된 대도시 지역	Scott (2001년)
메가시티리전 Mega-city region	• 10~50개 도시들이 물리적으로는 이격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1개 이상의 대도시권 주변으로 연계되고 클러스터화된 공간 • 새로운 기능적 분업으로 거대한 경제적 힘을 발휘	Hall and Pain (2006년)
대도시지역 Metro(politan) region	• 기능적 경제구역을 구성하는 인구, 경제활동의 대규모 집적체 • 경제구역은 다수의 경제적 연계가 집중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포함됨	OECD (2006년)
메가리전 Mega region	• 노동과 자본이 비용에 따라 재배치되는 도시 및 주변 교외배후지역 통합체 • 과거 대도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모는 과거보다 매우 큰 형태를 지님	Florida et al.(2008년) UN-Habitat(2010년)
	• 대도시권 중심과 주변지역의 네트워크, 환경, 경제, 인프라 상호작용 등을 통해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됨	Ross (2009년)

출처: 박경현 외 2020, 79 (원자료는 Harrison and Hoyler 2015, 8-9).

초광역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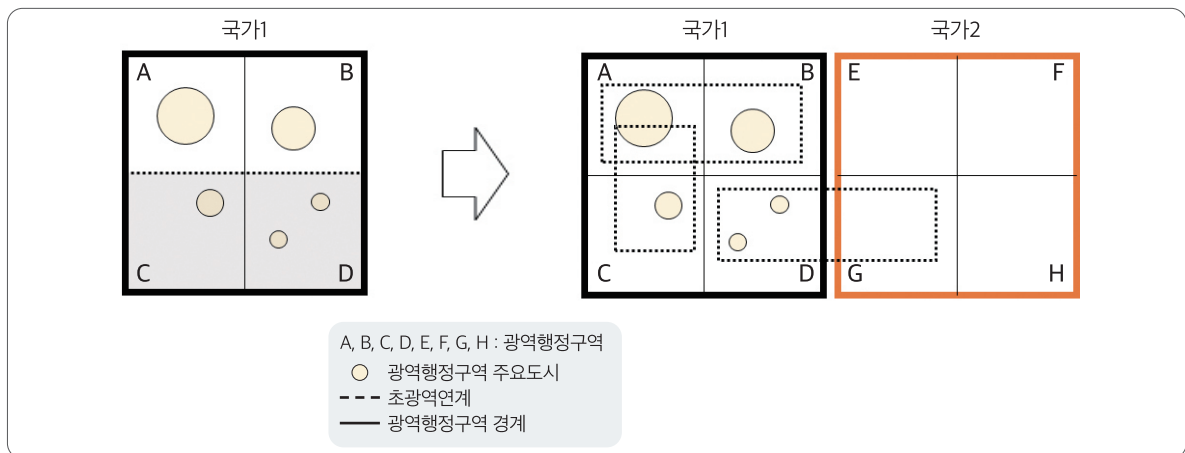
기존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초광역권의 특징은 중심성과 연계구조임

- 중심성은 공간집적체의 중심기능,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노드(node)적 속성을 의미, 연계는 거점과 주변지역의 연계, 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 도시와 도시 간 연계 등 권역 내·외에서 발생하는 동적인 흐름(flow)을 의미
-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권역을 형성하여 글로벌 스케일(scale)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권역 내에서는 중심도시와 인접지역 간 기능적·문화적 연계를 통해 동질지역을 형성

초광역권에 대한 공간 획정 어려움과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 초광역권은 경계가 없는 ‘edgeless city’(Lang 2003)이며, “새로운 경제·사회적 스케일로 기능”(OECD 2019, 2)하는 공간 집약체
- 도시와 지역은 ① 사람(통근·쇼핑·레저를 위한 일상적 이동,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이사 등), ② 상품(기업 간 제조 및 중간재 교류), ③ 서비스(은행·교육·헬스·비즈니스 등), ④ 캐피탈 및 자산(투자, 세금, 토지 및 부동산 보유), ⑤ 오염(수자원, 오염원 배출, 수질오염 등), ⑥ 환경자원(수자원·미네랄 등), ⑦ 지식(기술적 정보, 사회적 아이디어, 경험 등), ⑧ 사회적 규범·가치·정체성 등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 광역적 권역을 형성(Davoudi 2010, 51-52)
- 초광역권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며, 연계활동의 다양성으로 인해 초광역권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구역이 상호 불일치하게 되는 현상이 야기됨

그림 3 행정구역과 초광역권의 불일치



출처: 박경현 외 2020, 72.

규모의 거대성보다 다양한 스케일(scale)에서의 연결성 중시

- 초광역권은 지리적 현상이면서 정책적 산출물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현상과 실제 정책추진 간의 간극 조정 필요
- 초광역권의 경쟁력은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역이 가진 기반과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연결성에 있음
 - 초광역권은 정치적 경계선을 갖는 인위적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몇 개 도시-지역의 집합으로 형성되지 못함
- 지역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주변지역과 맺고 있는 산업적·기능적 관계와 연결에 기반해서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방향을 설정해나갈 수 있는 탄력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

3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진단

초광역권 공간전략은 1970년대부터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수단 중 하나

-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부터 하천유역권을 중심으로 4대권을 설정하고 권역별 계획을 수립
- 1980년대 28개 지역생활권 및 3대 지역경제권, 1990년대는 9개 권역, 3개 신산업지대, 10개 광역권 등을 추진
- 2000년대 3개 연안축, 3개 동서축,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과 7+1 경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제시

표 2 국토종합계획의 초광역적 공간전략 변천

구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년)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년)	제2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1987~1991년)	제3차 국토계획 (1992~2001년)
권역설정	• 4대권, 8중권, 17소권	• 28개 지역생활권	• 3대 지역경제권	• 9개 권역, 3개 신산업지대 조성
공간구상				
구분	제4차 국토계획 (2000~2020년)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2006~2020년)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2011~2020년)	제5차 국토계획 (2020~2040년)
권역설정	• 3개 연안축, 3개 동서축 • 10대 광역권	•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 • 7+1 경제권	• 초광역개발권 • 5+2 광역경제권	• 스마트 국토 구상 • 다양한 공간(권역) 형성
공간구상				

출처: 박경현 외 2020, 118-119 (원자료 대한민국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각 연도 자료에서 요약).

특히 2000년대 들어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아시아권 거대도시권 등장에 따라 본격적인 초광역권 발전전략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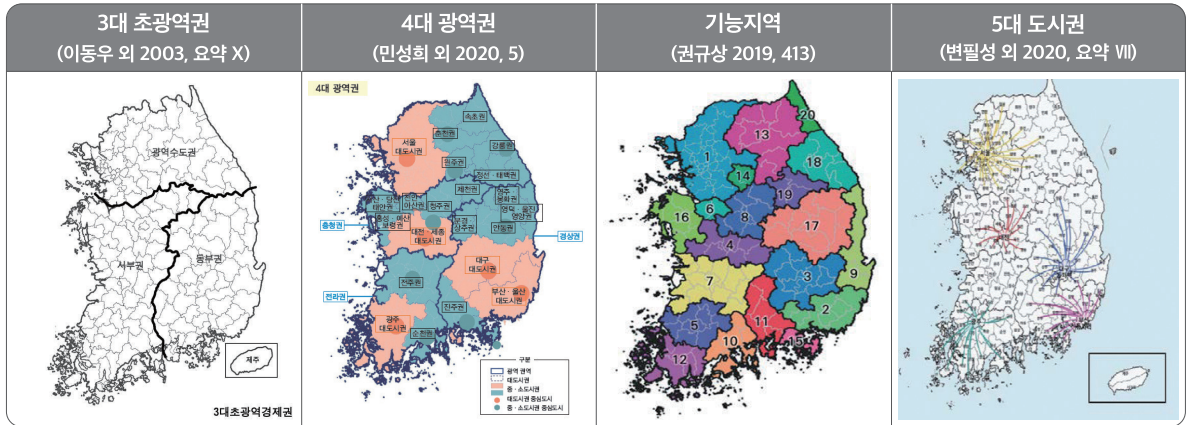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및 국가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2006년부터 초광역경제권을 구상
 - 2006년 4대 초광역경제권을 시작으로 2007년 5대 초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수정하여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을 국정과제로 선정
 - 선도사업을 지정·육성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개발용지 공급, 개발철차 간소화 등을 추진
- 박근혜 정부는 국민 만족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초광역권 사업이 오히려 약화됨
 -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했으나 기존 광역경제권 추진수단(광특회계,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은 폐지

초광역권 관련하여 광역권역 설정방안, 광역권 및 도시권 발전방안, 광역권 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등 논의 진행

- 광역권역 설정방안 연구는 지역 간 연계, 통근통학, 지역노동시장 등 광역화 현상에 주목, 대도시 인구 증가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출·퇴근, 쇼핑, 기업 간 거래관계 등에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화 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
- 광역권역 발전방안 연구는 도시권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및 전략, 광역대도시권 계획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 새로운 광역 협력사업의 설계와 추진방안 등 광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방안 제시

- 광역 협력방안을 행정구역 개편과 기능 개선 등 거버넌스 구조에서 찾는 논의도 진행됨
- 최근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짐

그림 4 광역화 현상에 기반한 초광역권 설정방안 연구 사례



출처: 박경현 외 2020, 60; 62-63 (원자료는 그림 위 참조).

기존 초광역 정책의 진단과 과제

① 공간전략의 부재

- 기존 초광역권 정책은 공간정책이 아닌 산업지원정책을 강조하여 장기적 관점의 공간전략은 수립되지 못한 채 소수 기업의 성장에 기반한 낙수효과만을 기대
- 기업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역 내에서는 중심도시와 인접지역 간에 기능적·문화적 연계를 통해 동질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 필요

② 중앙정부 주도로 인한 저조한 관심

- 그간 초광역권 정책은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진, 광역지자체 간 협력구조가 미흡한 상태에서 초광역 연계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 및 지자체 간 협력해야 할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부족
- 지자체는 초광역권 육성보다 초광역권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미완성의 프로젝트 발굴, 기존의 유사한 사업 내지는 지자체의 숙원사업을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도 함(기정훈 외 2020, 48)

③ 사업범위의 인위적 설정과 유연성 부족

- 광역경제권 공간범위를 중앙정부가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하여 광역경제권 공간범위가 지역경제권과 불일치 발생
- 5+2 광역경제권의 경우 권역설정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갈등을 야기했으며, 사·도 간 협력보다 자기 구역 내 개발을 우선시하여 지역 역량 증진에 소홀

④ 나뉘먹기식 예산 배분

-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위 ‘돈 되는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지자체 간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게 되고 자연스레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
-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국책사업 선정방식으로 인해 광역경제권 내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함(차재권 2017)

⑤ 성과 중심의 단기사업 추진

- 지역안배를 고려한 대규모 토건사업, 성과 중심 단기사업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지역 성과 기여도가 낮고, 초광역권에 대한 장기적 지원제도가 미미하여 정권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조급성 확대
- 초광역권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에 대한 장기 비전 및 전략이 필요하고, 필요 시 행정구역 재편, 특별행정기관, 초광역권 지원조직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4

초광역 연계 발전을 정책제언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기본방향

① 지역 주도

- 초광역권을 원하는 지자체가(who), 지자체 행정구역 공간에(when), 특정 지역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광역적 차원의 문제를(what), 대화와 협력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how) 해결하는 것이 초광역권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함
- 중앙정부가 권역을 지정 후 추진한 초광역권 정책은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함.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협력대상을 찾아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 필요

② 명확한 목적 설정

- 초광역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정통합인지, 행정구역은 유지한 채 초광역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설정할 필요
- 지역이 요구하는 형태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단기적 처방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초광역적 공간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수적

③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 초광역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몇 개의 인접 시·군을 묶어 덩치를 키우거나 권역별로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5대 전략

① (압축compact) 지방 대도시의 중추거점 기능 강화

- 초광역권은 국제적 핵심거점이자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화된 생활공간의 중추적 의미를 가지므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의 중추거점 기능을 우선 강화할 필요
- (해외사례) ESPON(2014년)은 거대 대도시, 지역 거점 도시, 소도시 및 낙후지역 등 성장 공간단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유럽의 지역정책 시나리오를 제시, '지역 거점 도시 중심 연계체계(시나리오 B)'가 지역 거점 성장으로 지역 간 교통 네트워크 발달 및 투자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됨
- (우선정책)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 지방 국립대학 강화 등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② (연결network) 지방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 대도시와 주변 지역이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초광역적 연결 구조 확립 필요.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인재·자본·일자리의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
- (해외사례) 미국 메가리전 전략의 5대 목표 중 하나는 '세계적 수준의 멀티모달 교통시스템 구축'임. 영국 광역 맨체스터는 지자체 협의회(AGMA)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시스템, 맨체스터 공항을 건설하여 10개 지자체가 공동 소유
- (우선정책) 광역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대도시권 법적 기준 검토, 생활권을 고려하여 광역교통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다양성diversity) 산업 다양성 확대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 5+2 광역경제권 지역별 선도산업은 신성장동력사업 위주로 추진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낮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했다는 평가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해 다양한 산업기반 구축 및 청년 노동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

- (우선정책) 산업단지 복합화, 스마트그린산단, 캠퍼스혁신파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산단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지원을 강화하여 초광역권에 부합하는 산업구조 변화 지원

④ (거버넌스governance) 초광역권 협력체계의 구축

- 초광역권은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공간적 이슈, 이해관계 등에 의해 역동적 변화 속성을 지니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
 - 1개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 파급효과가 여러 지역에 미치는 이슈, 집중투자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슈,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공동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이슈 등에 대한 초광역적 협력구조 확립
- (우선정책) 정부 차원의 초광역권 관장 행정기구 또는 초광역권 사업의 기획·집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조직 등 검토, 지역 주도 초광역권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원을 통해 우수사례 창출

⑤ (유연성flexibility) 목적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초광역권 설정

- 지역 주도로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초광역권을 설정하고, 교통·환경·주택·경제·재난 등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 필요
- (우선정책) 복수의 지자체들이 행정구역단위(시·도)를 넘어서는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 주도로 수립하는 가칭 ‘초광역권 종합계획’ 등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참고문헌

- 권규상. 2019. 네트워크 커뮤니티 발견법을 활용한 기능지역 구분의 의미와 효용성. 대한지리학회지. 54권, 3호: 405-420.
- 기정훈·소진광·임경수·임형백. 202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
- 민성화·이순자·홍사흠·유현아·조정희. 2020.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변필성·권규상·이호란·김다윗·김동한·김승범. 2020.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확장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이동우·김광익·박은관·문정호. 2003.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차재권. 2017.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사회과학연구. 25권, 2호: 130-174.
-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6월 27일. 보도자료.
- Bloomberg Citylab. 2019. The Real Powerhouses That Drive the World's Economy. 28 February.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2-28/mapping-the-mega-regions-powering-the-world-s-economy> (2021년 2월 2일 검색).
- Davoudi, S. 2010. Conceptions of the city-region: A critical review.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Urban Design and Planning*. 161: 51-60.
- 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ESPO). 2014. *Making Europe Open and Polycentric-Vision and Scenarios for the European Territory 2050*.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 Harrison, J. and Hoyler, M., 2015. Megaregions: foundation, frailties, futures. In Harrison, J. and Hoyler, M.(eds.), *Megaregions: Globalization's New Urban Form?* Cheltenham, UK and Norhampton, MA, USA: Edward Elgar.
- Institute for Government. 2021. Current state of English devolution by mayoral arrangement and metro mayor party.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charts/english-devolution-mayoral-arrangement-metro-mayor-party> (2020년 12월 3일 검색).
- OECD. 2019. *OECD Territorial Reviews: Hamburg Metropolitan Region, Germany*. OECD Territorial Reviews. Paris: OECD Publishing.
- Lang, R.E. 2003. *Edgeless cities: Exploring the Elusive Metropol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United Nations(UN). 2018. *The World's Cities in 2018-Data Booklet*. Newyork: UN.
- Vikidia. Région(France). https://fr.vikidia.org/wiki/R%C3%A9gion_ (2021년 2월 2일 검색).

※ 이 브리프는 '박경현·이윤석·허동숙·최예슬·정준호·강민규, 202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정리한 것임

•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khpark@krihs.re.kr, 044-960-0222)

• **이윤석**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yslee@krihs.re.kr, 044-960-0365)

• **허동숙**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dshuh@krihs.re.kr, 044-960-0260)

• **최예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yschoi@krihs.re.kr, 044-960-0167)

